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복지태도 차이에 관한 다집단경로분석 연구*

안상훈**

요약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사회계층화 변인들의 이론적 경로구조가 두 집단 사이에 동일하지, 차이가 난다면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두 집단에 관한 비교가능한 사회조사자료에 대해 다집단경로분석을 실시, 형태동일성 검증과 등가성제약 검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기본적인 형태동일성이 확인되었고 교육수준 변인으로부터의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에서 경로 계수에 대한 집단 간 등가성제약도 확인되었다. 사회계층론의 객관적 지표인 교육수준, 소득수준, 주거지위가 주관적 지표인 계층의식을 매개로 하여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검증된 것이다. 이는 인적자본론과 주거계층론의 주요 논점을 재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연구결과는 실천적 함의도 지닌다. 통일시대 남북주민 간 사회통합의 중심적 이슈로서 복지정책의 갈등구조를 남북한 지역갈등을 넘어 연착륙시킬 정책적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정책의 방향성이 인적자본향상이나 주거안정 관련된 사회서비스로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도 제안하였다.

주요어: 복지정치, 복지태도, 복지지위론, 북한이탈주민, 다집단경로분석, 형태동일성, 등가성제약

* 이 연구는 2018년도 서울대학교 미래기초학문분야 기반조성사업으로 지원되는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hoonco@snu.ac.kr)

1. 서론

이 연구는 복지정치태도의 경로구조와 각 경로의 영향력이 북한이탈주민¹⁾과 남한주민 사이에 동일하지를 검토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복지태도 관련 특이성을 확인하고 통일시대 친복지정치의 균열지형을 가늠해보고자 하는 서설적(序說的) 경험연구이다.

통일비용의 상당 부분을 복지비용이 차지하리란 것은 쉽게 예상되는 사항이다(문술미래전략대학원, 2018). 독일통일과정에서의 경험을 고려하거나 현재 한국에서 급속히 진행되는 복지의 제도화를 전제로 추산해보면 이런 예상은 분명한 근거를 확보한다. 성공적인 통일의 전제조건이 남북한의 사회통합인데, 그중에서도 복지정치를 둘러싼 담론과 인식의 통합이 중요하다(김상돈·서운석, 2016). 사회통합 관점에서 진행된 통일 독일 인식연구들을 봐도 동·서독 주민 간에 복지국가의 사회보장 관련 부담과 수혜 문제에 대한 갈등이 상당했었음이 확인된다(최승호, 2010; Kuhn, 2013). 우리의 경우를 보더라도 경제적 우위에 있는 남한 주민들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복지확대 비용을 감당해야 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통일과정의 복지정치에서 인식의 균열이 일반적인 계층구조를 넘어 남과 북의 주민 사이에 강하게 형성된다면 그 자체로 통일의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복지확대 과정에서 계층 간의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는 것도 북한 마당에 자칫 남북주민 사이의 갈등까지 더 해진다면 통일시대의 사회통합은 요원할 수도 있다.

남한주민들과 북한이탈주민들은 각각 태어나서부터 일정 시간 동안 서로 다른 정치적·경제적 이념과 사회제도 속에서 살아왔다. 두 집단은 근본적인 이질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학 연구에서도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규범이 크게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된다(Kim, 2017). 이러한 이질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적 갈등이나 위험요인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질적 규범이 복지태도의 극명한 차이로 연결될 경우 앞으로 통일 한국의 안정된 복지정치를 준비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지확대과정에서의 갑론을박이 종종 정치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더라도, 통일시대의 복지는 사회통합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복지는 정치(politics matters)’이다(Esping-Andersen, 1990). 결국, 통일시대의 사회통합은 남북주민의 복지태도 구조가 동질적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처음에는 ‘탈북자’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었으나 1997년 1월 동법이 제정되면서 ‘귀순’ 개념이 ‘북이탈’로 바뀌었다. 한때 통일부의 제안에 따라 ‘새터민’으로 용어 변경을 추진했으나 정작 탈북단체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급기야 통일부도 ‘새터민’ 사용의 중단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입국 규모는 1998년 이후 꾸준히 증가, 2017년 12월 말 기준 31,339명에 이르고 있다(한국학중앙연구원, 2019)

것이다. 예컨대, Kuhn(2013)의 연구에 의하면 동독 주민들은 정부의 재분배 역할과 누진적 조세에 훨씬 더 지지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동·서독 주민 간 복지 인식의 균열이 분명했었기에 통일 이후 독일의 복지정치는 갈등적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렇게 보면, 다른 체제에서 태어나고 자라 근원적인 인식의 차이를 보이는 남북한 주민들이 복지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 면에서 남북으로 나뉘는 균열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 서로 섞인 상태에서 일반적인 사회계층에 따라 균열을 형성할 것인지를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복지정치가 일국적(一國的) 정치가 되는 편이 남북주민이 딴 나라 사람인 것처럼 다투는 형국이 되는 상황보다는 갈등조정역의 여지와 복지전략의 통합적 적용에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론적 견지에서 보자면, 복지정치에서의 ‘행위(action)’는 ‘태도(attitude)’로부터 파생되며, 태도는 다시 개인들이 복지의 권리(rights)와 의무(duties) 관계 속에서 어떤 지위를 지니는지에 따른 이해관계의 균열이 결정한다(Ahn, 2000). 이 과정에서 투표와 같은 행위 자체도 중요하지만, 복지정치에서의 태도가 더 관심을 받아 마땅하다. 단기적으로 결정되고 완성되는 정치적 ‘행위’와 비교하면 장기적으로 형성되고 지속하는 특성이 있는 ‘태도’에 집중하는 것이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는 데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지태도를 종속변수로 해서 복지정치의 경로 구조를 탐색하려 한다.

요컨대, 통일과정에서의 남북한 복지 격차의 동조화 혹은 축소 문제는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이면서 대단히 정치적인 문제라 여겨진다. 북한이탈주민과의 복지태도 비교분석을 통해 통일 복지전략의 정치적 밑그림을 탐색해보는 일이 중요한 까닭이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조사는 응답자 확보 면에서 상당히 난해한 일이며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표본추출이나 분포 등 면에서 북한주민을 모집단으로 삼기에는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치 지형을 탐색하는 첫걸음으로서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사실, 통일 이전에도 이미 북한이탈주민의 유입은 오늘날 한국 복지정치의 현실 문제이기도 하다. 상이한 체제로의 진입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자본주의 체제에 잘 적응하느냐의 문제는 그 자체로 중요하다. 경제적 성공이나 실패 그리고 경제적 결과에 대한 수용이나 수정의 요구 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주민과 차이를 보이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체제 적응’의 척도가 될 수 있다. 만약 양자 간에 상이한 부분이 있다면 이 간극을 메워주는데 복지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두 집단 간 사회통합의 첩경이 될 수도 있다.

한국인의 복지태도와 관련된 연구는 상당 부분 축적되어있으나 다양한 방식으로 이론적 방법론적 한계를 노정한다. 한편, 복지태도와 관련한 북한이탈주민 인식연구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사회정책학적 복지태도 연구의 이론적·경험적 축적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권수현·이성우,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복지태도에 관한 경로구조가

동일한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지점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다집단경로분석(multi-group path analysis)을 통해 통계적으로 분석하려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복지정치인식 경로의 구조와 영향력은 동일한가? 둘째, 다르다면 어떤 점에서 왜 다른가?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계급론과 탈계급론

이 연구에서 다루는 최종 내생변수인 종속변수는 복지태도이다. 복지태도의 개념은 기존 연구들에서 다양한 방식의 조작적 정의로 이어졌으며 이 개념에 관한 정의 문제 자체도 하나의 연구대상으로 남겨진 상태이다. 복지국가를 자본주의의 수정이라 보면, 지나친 소득격차라는 시장실패의 수정과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 강화를 복지태도의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국제기구의 정책목표 논의가 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각종 인식조사에서 이와 관련된 변수들이 복지인식의 지평을 가르는 대표적 중심변수로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득격차 수정에 관한 정부역할’로 복지태도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복지태도의 균열에 관한 기존 문헌들은 주로 자기이해(self-interest)에 기반한 계급의식의 산물로서 복지태도의 차이가 노정된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조돈문, 2001; 이성균, 2002; Giddens, 1983; Svallfors, 1995). 계급론에 토대를 둔 복지태도 연구들은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의 이분법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계급에 따라 공공복지의 범위를 유지할 것이냐 감소할 것이냐에 대한 정치적 이해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계급이 복지태도 균열의 주요 변인이라 보는 입장이다(Esping-Andersen, 1990, 1999; Papadakis, 1992, 1993; Svallfors, 1997, 1999, 2004).

하지만, 복지국가의 위기 논쟁 이후에는 계급이 분석적 준거로서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논의도 많다(Papadakis, 1993, Ahn, 2000; 신광영·조돈문·이성균, 2003; 주은선·백정미, 2007). 복지국가의 제도화가 파생한 개별적 복지지위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진다(Ahn, 2000). 이러한 탈계급론의 입장에서는 개인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중요시한다. 탈계급적 논의들도 복지태도에 관해서 개인 또는 집단 간 균열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기이해(self-interest)’의 측면에 있다고 보지만 균열선은 다원화된다고 가정한다는 면에서 계급론과

분기된다(안상훈, 2002; 김수완 외, 2014). 다원적 자기이해 관점(pluralistic self-interest perspective)에서는 이전소득의 수혜자이거나 복지국가에 금전적으로 의존할 위험이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공공복지 정책을 더 지지할 것이라 본다(Jaeger, 2006b).

기존 연구들을 보면 복지태도의 변인들은 연구에 따라 달라지며 많은 경우 투입변수의 묶음에 따라 통계적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한국인의 인식구조가 계급적이지도 않고 또 한편으로 복지제도의 저발전으로 인해 제도 관련 세밀한 이해관계를 인식하거나 명확한 태도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해석이 대세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는, 게다가 남한주민과 비교를 시도하는 실증연구에서는, 서구 복지선진국의 자본주의 수정 경험에 바탕을 둔 이론적 변수들을 모두 적용하기에 현실적인 한계가 노정될 수밖에 없다. 현실적인 타협점은 상대적으로 간결하며 기본적인 사회계층론의 측정변인들을 중심으로 복지태도의 결정구조를 파악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본 연구의 모형이 상대적으로 간략하게 구성된 이유이다.

2) 객관적 요인과 주관적 요인

계급이나 탈계급적 복지지위냐의 논쟁에 더해 계급이나 계층의 객관적인 측면이 중요한지 주관적인 측면이 중요한지에 관한 논쟁도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맑스주의에서는 자본가와 노동자로 계급을 구분한 데 비해, 주관적 계층의식의 개념은 주로 베버적 전통에서의 사회계층(stratification) 연구의 일환으로 발전하였다(Karlsson, 2017). 먼저, 전통주의적 계급 접근에서는 집합적인 과정을 통해 계급 정체성이 생겨난다고 보며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을 동시적이고 결합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이에 비해 문화주의적 계급 접근에서는 자신과 타인의 사회문화적 행동을 비교하는 위계적인 과정을 통해 계급 정체성이 생겨난다고 보아 객관과 주관의 분리를 인정한다. 계급이 실제 존재하긴 하지만 자동적으로 계급의식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Ritzer and Stepnisky, 2012; 정운태, 2018에서 재인용). 마지막으로, 탈계급적인 준거 집단 이론(reference group theory)에서는 사회 전체보다는 자신과 가족, 친구들과 관련된 개인 수준의 경험에 기반해서 계층 내 자신의 위치를 판단한다고 본다. 물질 혹은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을 분리한다는 면에서 준거집단이론과 문화주의적 계급론은 사유의 방향성이 유사하다.

베버주의에서는 사회계층이란 것이 시장적 위치에 따라 상이한 지위집단(status group)으로 나뉜다고 본다. 사회계층은 다시 객관적 경제지위(economic status)와 주관적 인지등급(perceived rank)으로 분류되고 조작적으로 정의된다(Kraus et al., 2012; Lott & Saxon, 2002;

Kraus et al., 2010; Kraus et al., 2011; Lott, 2012; Côté et al., 2013; 정운태, 2018에서 재인용: 186). 그리고 사회계층의 객관적인 측정은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종이라는 세 가지 항목이 대표적 지표로 주로 제안된다(Stephens et al., 2012; 정운태, 2018에서 재인용: 186). 이에 더해, 주거지위도 이론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확인을 거친 중요한 지표 항목으로 거론되며, Rex & Moore(1967)는 주거계급(housing class)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키기도 하였다.

이에 비해, 사회계층의 주관적 측정은 공동체 내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물적 자원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Kraus et al., 2010; Kraus et al., 2011; Kraus & Keltner, 2013; 정운태, 2018에서 재인용: 186).²⁾ 사람들은 교육이나 소득과 같은 객관적 특질로만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평가하지는 않으며, 준거집단(reference group)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Lindemann, 2007). 이렇게 보면, 사회계층 개념의 두 가지 하위 측정 차원인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 사이에도 모종의 경로가 예상된다. 주관적 측정이 객관적 물적 자원을 타인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므로 주관적 지표가 객관적 지표군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계층의식이 사회계층구조와 행위를 매개하는 연결고리라는 점은 기존연구들에서 다수 적 시된 바와 같다(Crompton, 1993; 김병조 2000; 서광민, 2009).

3) 대안적 경로구조와 기존연구의 경험적 증거

(1) 계층의식의 매개효과

기존 연구를 보면 교육, 소득, 주거 등 객관적 지위가 태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고 복지태도를 종속변수로 삼아 분석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들 결과는 서로 엇갈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허수연·김한성, 2016). 국외 연구들이 주로 영향력 여부와 방향성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한편, 국내 복지태도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계급이나 계층 관련 변수들의 영향력에서 서로 다른 결과들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복지정치가 근자에 와서야 본격화된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객관적 계층 변수가 직접적으로 복지태도를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계층의식 변수의 매개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다. 실제로 복지태도에 관한 기존연구 대부분은 결정 변인들을 하나의 평면에 배치하는 방식의 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이론적으로 상관성이 높거나 모종의 경로가 예상되는 변수들

2) 주관적 계층의식은 객관적 계층 지위들 간의 평균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며, 주관적 계층의식에 관한 경험 연구들을 보면 소득수준, 교육수준과 직종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다(Adler et al., 2000; 정운태, 2018에서 재인용).

이 다중공선성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개별변수들의 영향력을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데 한계를 노정할 수 있다.³⁾

앞에서 설명한 계층이론의 논리구조를 보아도 주관적 요인인 계층의식이 객관적 지표에 의해 형성되는 가장 근원적인 변수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주요 객관적 변인들이 계층의식을 형성하고 이렇게 형성된 일반적 계층의식이 특수적 인식인 복지태도를 결정한다고 가정하고자 한다. 객관적인 결정요인들이 연구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주관적 계층의식은 복지태도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연결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도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된다.

(2) 주거지위의 중요성

객관적 요인으로 거론되는 교육, 소득, 직업지위⁴⁾가 사회경제적 지위의 조작적 정의로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데 반해, 주거지위는 다수 학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데 비해 경험연구들에서 종종 누락되는 변인이다. 주거 중심 사회적 균열을 다룬 주거계층론에 의하면 전통적인 계급이 아닌 주거와 관련된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지니는 계층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Rex and Moore, 1967). 사람들은 자가소유를 성공한 인생의 핵심으로 여기는 등 주거에 대해서 의미 있는 사회문화적 가치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Saunders, 1989; Rohe & Stegman, 1994, Couper & Brindley, 1975; Townsend, 2002; Fu & Lin, 2013, Chen et al., 2019에서 재인용: 222). 주거계급론과 단일 가치 체계의 존재에 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다수 학자들이 주거의 중심성을 인정한다(Benjamin et al., 1995; Dupuis & Thorns, 1996; Zavisca & Gerber, 2016; Chen et al., 2019에서 재인용: 223).

실제로 주거는 각 가구의 소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중요한 자산인 경우가 많다(Saunders, 1984). 주거지위는 주거관련 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며 복지국가에 대한 이해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주거지위가 높은 구성원들은 사적 자산을 활용한 소비가 가능하고 공공영역을 통한 복지를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납세자로서 부담을 질 공산이 크다(Ahn, 2000). 전통적으로 계급에 기반을 둔 복지정치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한국 상황에서는 전통적 계급보다 주거와 관련된 이해관계 균열이 더 중요해 보인다(안상훈·박종연·김수완, 2013).

3) 본 연구에서는 교육, 소득, 주거 등 객관적 지위가 주관적 계층의식을 통해 태도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모형과 객관적 지위가 복지태도에 직접 연결되는 모형을 비교 검토하였다. 두 모형에 관한 다집단경로분석 결과 본 연구의 연구모형인 '간접적 영향'만 모형적합도를 적정수준에서 확보하였다. 적어도 경험적으로 볼 때, 객관적 지표가 복지태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모형 평가면에서 간접효과 모형이 우월하다고 하겠다. 모든 경로를 타진하고 경쟁모형 중에서 모형적합도가 가장 높은 모형을 도출하는 과정은 지면의 제약 상 생략하기로 한다.

4) 직업지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낮은 직업지위로의 편포가 과다하며 결과적으로 모형 적합도를 떨어뜨린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업지위를 생략한 대신 주거지위를 포함하는 연구모형을 제안하고 검증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주택은 물리적 공간의 의미를 넘어 자산 소유 및 증식의 중심 수단으로 기능하기에 사회계층화나 계급갈등의 중심을 차지한다(한영광·서우석, 2014).

(3) 객관적 지표 간 경로

인적자본이론에 의하면, 교육이나 훈련과 같은 투자를 통해 인간의 자본적 가치 혹은 생산력이 증대되므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클수록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Schultz, 1963; Mincer, 1974; Becker, 1975; 김기승·오유, 2012에서 재인용: 35). 한편, 학력선발론 등의 신호이론에서는 교육이 특정 개인의 생산성을 반영하기보다는 타고난 능력에 관한 간접적인 신호로 작동한다고 본다(김기승·오유, 2012). 이러한 이론들에 따른 경험연구들은 교육이 실제 생산성이나 인적자본의 척도가 될 수 있느냐에 관한 이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의 소득 증대를 올리는 효과만은 분명하다는 결론을 공유한다.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주거지위가 높아지는 경향성은 비교적 간단한 논리적 추론으로서 이 역시 많은 경험연구의 결과가 이를 지지한다. 요컨대, 사회계층의 세 가지 객관적 지표들 사이에도 논리적·경험적인 선후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경로구조 모형의 특정화(specification)에 포함한다.

(4) 변수 간 관계에 관한 기존 경험연구

선진국 인식연구가 활발한 것처럼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관한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교육수준, 소득수준, 주거지위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회계층의 객관적 측정변인들의 영향력이 서로 다른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분석에 활용된 자료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복지발전의 상이한 시점이 문제일 공산이 있다. 둘째, 교육수준, 소득수준, 주거지위 등은 상호 상관성이 높은 변인들이라 동시에 모형에 투입될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셋째, 사회계층이론에서 논리적으로 도출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 지표들은 주관적 지표와 함께 다뤄져야 하는데 주관적 지표의 매개효과를 배제할 경우 모형특정화(model specification)의 오류로 귀결될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의 모형특정화는 사회계층의 객관적 변인들이 주관적 변인을 통해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방식으로 설정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 포함된 일련의 변수들에 관한 기존 경험연구들은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표 1] 변수별 기존 경험연구 결과 정리

내생변수	외생변수	영향력을 확인한 기존연구 ⁵⁾
교육수준	복지태도 ⁶⁾	Hansenfeld & Rafferty(1989), Dallinger(2010), Rehm(2009), Gërkhani & Koster(2012), Jæger(2006a, 2006b), Kitschelt & Rehm(2006), Lipsmeyer & Nordstrom(2003), 김희자(1999), 최균·류진석(2000), 주은선·백정미(2007), 류만희·최영(2009), 노대명·전지현(2011), 김수완 외(2014), 이진숙·송혁·이흥기(2016) ⁷⁾⁸⁾
소득수준		Dallinger(2010), Edlund(1999), Hansenfeld & Rafferty(1989), Häusermann & Walter(2009), Iversen & Soskice(2001), Rehm(2009), Kitschelt & Rehm(2006), Lipsmeyer & Nordstrom(2003), 안치민(1995), 이인재(1998), 주은선·백정미(2007), 김신영(2010), 김영순·여유진(2011), 이훈희 외(2011), 김윤태·서재욱(2014), 김수완 외(2014), 김희자(2013) ⁹⁾
주거지위		이진숙·송혁·이흥기(2016), 안상훈·박종연·김수완(2013)
교육수준	계층의식 ¹⁰⁾	Piff et al.(2010), Adler et al.(2000), 김승권·이태진(2010), 송유진(2015), 서찬란(2018), Lindemann(2007), Evans and Kelley(2004), 김병조(2000) ¹¹⁾
소득수준		Adler et al.(2000), Lindemann(2007), Karlsson(2017), Piff et al.(2010), Goldman et al.(2005), Lindemann & Saar(2014), 김승권·이태진(2010), 송유진(2015), 서찬란(2018), 서광민(2009), 김병조(2000), 송한나·이명진·최셋별(2013)
주거지위		Lindemann(2007), Megbolugbe & Linneman(1993), Rossi & Weber(1996), Rohe & Stegman(1994), Dietz & Haurin(2003), 김승권·이태진(2010), 서찬란(2018), 한영광, 서우석(2014)
교육수준	소득수준 ¹²⁾	Mincer(1974), Houthakker(1959), Becker(1964), 김강호(2009), 이광호(2002), 신경수·최창렬(2007), 채구목(2015), 김교성·최영(2006), 김원정·류진석(2019)
소득수준	주거지위	신광영(2016), 이수옥·강성우·방보람(2018), 오지현·여유진(2009), 이윤홍(2016)

4) 연구모형과 가설

사회계층의 객관적 측정과 주관적 측정에 관한 기존 논의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지표들이 주관적 지표에 선행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한편, 객관적 지표로서는 직업지위 대신 주

5)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들은 각주로 제시하였다.

6) 별도로 참고문헌에 적시되지 않은 경우는 허수연·김한성 (2016), 이상은·김희찬 (2019)의 문헌 정리를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7) 김상균·정원오(1995), 이인재(1998), 이성균(2002), 류진석(2004), 백정미 외(2008), 김신영(2010), 김영순·여유진(2011), 이아름·이사현(2010), 김희자(2013), 김윤태·서재욱(2014) 등은 영향력이 없다는 결과를 도출한다.

8) 국외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친복지태도에 부정 영향을 보인다는 보고가 대중인 데 반해 국내 연구 중 일부는 정적 영향을 보고하고 있어 이것이 교육수준에 따른 '계몽된 이타주의'(Derks, 2004; 노병래, 2014에서 재인용)의 영향인지 모형 특정화의 오류에 따른 다중공선성 문제인지는 추가적인 실증적 검토가 필요하다.

9) 백정미·주은선(2006), 류만희·최영(2009)에 의하면 이 경로에 영향이 없다고 한다.

10) 별도로 참고문헌에 적시되지 않은 경우는 정운태(2018), 서찬란(2018), Karlsson(2017), Chen et al.(2019) 등의 문헌 정리를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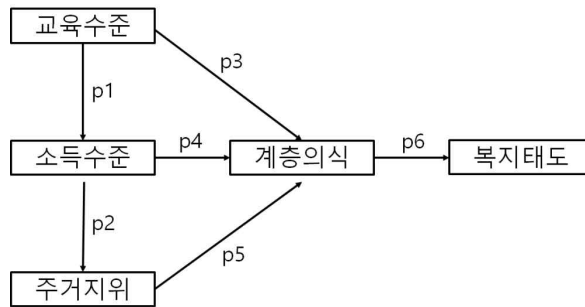
11) Karlsson(2017)은 영향력이 없다고 보고한다.

12) 별도로 참고문헌에 적시되지 않은 경우는 김기승·오유(2012)의 문헌 정리를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거지위를 교육수준, 소득수준과 함께 투입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예비분석의 과정에서 복한이 탈주민 자료에 관한 한 이상 분포의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직업지위관련 변수이다. 이 집단의 경우 직업지위가 낮은 쪽으로 편포됨과 동시에 직업지위에 관한 변수의 전반적인 변량 축소를 노정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직업지위의 경로상 통계적 영향력을 무의미하게 만들 뿐 아니라 전체 모형의 적합도를 떨어뜨린다.¹³⁾ 이러한 예비적 분석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교육수준, 소득수준, 주거지위의 3 요소를 계층의식을 결정하는 주요 변인으로 취급하고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각 경로와 변수 간 경로구조를 연구모형의 형태로 정리한 것이 아래 그림이다. 본 분석에서는 첫째, 각 경로구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둘째, 경로구조의 형태동일성이 두 집단 간에 확보되는지, 셋째, 경로들에 관한 등가성제약이 두 집단 간에 확인되는지, 넷째, 등가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즉 두 집단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는 경로가 무엇인지에 관해 차례로 검토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과 각 경로에 관한 가설¹⁴⁾



3.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두 그룹 간의 비교를 위한 토대자료는 ‘한국 사회정책육구 및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이다.¹⁵⁾

- 13) Adler et al.(2000) 등 연구에 따르면 주관적 계층의식이 교육수준과 소득수준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지만 직업적 지위와는 큰 관련이 없다.
- 14)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관련 3변수, 즉 교육수준, 소득수준, 주거지위에서 외생변수인 복지태도에 이르는 직접경로들까지 포함하는 경쟁모형들도 검토하였으나 모형적합도가 낮아서 최종결과로는 채택하지 않았다. 이는 객관적 변인들과 주관적 변인이 동시 투입될 경우 발생하는 다중공선성 문제와 관련된다.
- 15) 서울대학교 사회정책연구팀은 2006년부터 격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 1-3차)의 지원 및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과제(4-6차), 서울대학교의 지원(7차)을 통해 ‘한국 사회정책 육구 및 인식조사’를 7차례 실시한 바 있다.

본 분석에 사용한 최신자료는 7차 조사이다.¹⁶⁾ 만19세 이상 성인을 모집단으로 삼아 2018년 9월을 기준으로 한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맞게 무작위 추출한 1,205명을 표본으로 조사하였다.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2.8\%$ 이다. 면접원이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직접 대면조사를 통해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조사 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이다.

이 조사의 설문을 토대로 북한이탈주민 표본에 대한 대응 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였다.¹⁷⁾ 전국 만 19세 이상 북한이탈주민을 모집단으로 하여 북한이탈주민 인구분포에 맞는 층화표집을 기본으로 응답 거부 시 표집 지역단위 내 섭외 가능한 유사 표본을 대체 사용하는 판단추출법을 병행하였다. 이에 따라 응답 수용도 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일부 변수들에서 분포상의 문제를 노정한다. 이는 정규성 검증을 통과한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해야 하는 한계로 이어진다. 표본크기는 300명으로 직접 방문에 의한 1:1 개별면접조사를 진행하였고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이다.

2) 변수

[표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	설문 내용	점수
복지태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반대한다(1) - 매우 동의한다(5)
계층의식	한국사회를 10개의 층으로 나눈다면 현재 귀하의 가정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하층(10) - 최상층(1)
주거지위	귀 닥이 살고 있는 주택의 소유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무상(1) 월세(2) 보증부월세(3) 전세(4) 자가(5)
소득수준	현재 함께 살고 계시는 가구원 모두의 한 달 평균 총수입은 얼마 정도입니까?	___만원
교육수준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무학(1) 초졸(2) 중졸(3) 고졸(4) 2·3년제대졸(5) 대졸(6) 대학원이상(7)

16) 이 조사는 6차까지의 조사와 연동 가능한 조사로서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이 2018년에 실시한 '북한국가시대, 사회공헌 및 서울대의 역할에 대한 인식조사'이다.

17) 남한과 북한의 복지정치 지형을 북한이탈주민을 대리(proxy) 모집단으로 하여 비교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복지에 대한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미시자료에 기댈 수밖에 없다.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018년 5월 통일부 등록자료 기준, 총 26,693명에 달한다(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9). 규모 면에서 전수조사 혹은 그에 필적할 조사자료가 확보된다면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주민 전체를 모집단으로 하는 분석에 활용할 수 있을 여지가 생길 것이다. 단, 본 연구를 위해 수집한 자료는 300개에 그쳐 본격적인 남북한 주민 비교연구로서는 한계를 노정하기에 해석의 제한이 필요하다.

[표 3]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기초통계 비교

	복지태도		계층의식		주거지위		소득수준		교육수준	
	북	남	북	남	북	남	북	남	북	남
N	300	1205	300	1205	300	1205	300	1205	300	1205
평균	4.17	3.80	2.62	4.60	3.05	4.60	174.24	418.7	4.16	4.36
표준편차	.813	.885	1.970	1.496	.663	.816	117.918	216.265	1.024	1.253
최소값	1	1	1	1	1	1	20	0	1	1
최대값	5	5	10	9	5	5	600	1000	7	7
왜도	-1.029	-.679	1.486	-.150	.851	-2.357	1.038	.558	.396	-.322
첨도	1.516	.322	2.013	-.174	2.638	-5.668	.806	.296	.925	-.152

[표 3]에는 변수들의 기술통계치가 제시되어있다. 다집단경로분석의 경우 각 변수들의 정상 분포조건이 충족되어야 결과치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술통계치들을 볼 때, 일반적인 정상분포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Hong et al., 2003).¹⁸⁾

3) 분석방법

복지태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이 주로 회귀분석을 통해 개별 변인의 유의성을 같은 평면에서 검증하였으나 이러한 접근법은 변수 간에 가정되는 인과관계의 선후 관계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한다. 복지태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양한 독립변수를 투입한 연구들의 결과가 포함된 변수와 분석된 자료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도 일정 부분 방법론적 한계에 의한 것일 공산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계층화의 이론적 성과들을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변수 간의 직접효과뿐 아니라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도 확인할 수 있도록 경로모형을 상정하고 다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을 통해 두 집단의 모수를 동시 추정하였다.¹⁹⁾

다집단경로분석은 다음과 같은 차례로 이루어진다. 첫째 단계는 변수 간 모든 경로들 간의 관계가 집단 간에 동일하게 구현되는지를 확인하는 형태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 검증이다. 각 집단별로 동일한 모형이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나면 형태동일성을 만족하는 것이며, 만약 검증결과 두 집단에 대한 경로구조가 유사한 형태를 보이지 않는다면 다음 검증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Hong et al., 2003).

분석의 두 번째 단계는 등가성제약(cross-group equality constraints) 검증이다. 이는 모형

18) 왜도 < 2, 첨도 < 7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한주민의 자료는 8개의 고소득자 이상점 사례가 분포의 왜곡을 초래한다. 원자료 값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왜도 5.751 첨도가 77.868로 지나치게 커져서 1000만원 상한값으로 조정하여 분포 왜곡을 해소하였다.

19) IBM SPSS AMOS 23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에 포함된 일련의 회귀계수들에 대해 제약을 가한 후 경로마다 집단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Byrne, 2001). 집단 간 등가성제약은 집단 별 경로계수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모형 내에 존재하는 경로계수에 각각 동일성 제약을 준 모형과 그렇지 않은 기저모형(base-line model)을 비교한다(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 경로상 계수 값에 집단 간 등가성제약을 준 모형과 기저모형 사이의 카이제곱 차이($\Delta\chi^2$)를 보아 집단 간에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지 검토하게 된다.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경우, 모수에 대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이라 해당 경로의 계수 값에 대한 등가성은 성립하지 않게 된다.

4. 분석결과

[표 4]에는 단계별 분석모형이 적합도가 제시되어있다. 기저모형의 모형적합도가 모두 좋은데 반해, 전체경로에 대한 등가성제약 모형의 경우 χ^2 , RMSEA, NFI, CFI, TLI의 적합도 지수들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모든 경로값에 관한 등가성제약이라는 강한 가정은 성립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단, 연구모형에 관한 가설 중 형태동일성 가설은 채택된다. 집단 간 등가성제약 모형 중 전체경로 모형은 기각되지만 부분적으로 등가성제약이 성립되는 경로가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표 4] 모형적합도

	χ^2	자유도	p	RMSEA	NFI	CFI	TLI
형태동일성모형	12.971	8	0.113	.020	.977	.991	.977
등가성제약모형	86.166	14	.000	.059	.849	.869	.813

주: 모형적합도의 판단기준: RMSEA <.03 excellent fit <.06 good fit(Hu & Bentler, 1999); NFI, CFI, TLI >.95 very good fit >.90 acceptable fit(Bentler, 1990; Hu & Bentler, 1999; Tucker & Lewis, 1972; Klein, 2011; Lee et al,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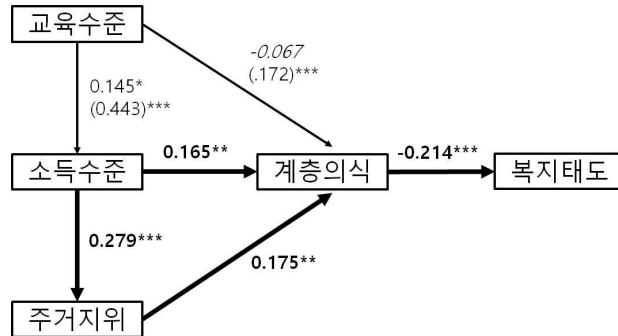
[표 5] 기저모형과 경로별 추정계수 동일성 제약 모형 간 차이 비교

동일성제약을 가한 경로	자유도 변화량	χ^2 변화량	TLI 변화량
p1: 교육수준 → 소득수준	1	54.047***	.211
p2: 소득수준 → 주거지위	1	3.105	.006
p3: 교육수준 → 계층의식	1	8.349**	.027
p4: 소득수준 → 계층의식	1	2.730	.004
p5: 주거지위 → 계층의식	1	2.733	.004
p6: 계층의식 → 복지태도	1	3.056	.006
모든 경로 동일성 제약	6	73.195***	.165

주: ; 유의수준은 p<.001 ***, p<.01 **, p<.05 *으로 표시함

[표 5]를 보면, 제안된 연구모형 중 기저모형의 형태동일성이 확인된 상황에서 교육수준에서 소득수준, 교육수준에서 계층의식에 이르는 두 가지 경로의 계수를 제외하고는 북한이탈주민 집단과 남한주민 집단 사이에 계수값까지 동일하게 고정할 수 있는, 이른바 ‘부분적 등가성 제약’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복지정치 경로 구조



주: 경로의 수치는 기저모형의 북한이탈주민의 표준화계수(남한주민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괄호 속에 제시함); 유의수준은 $p < .001$ ***, $p < .01$ **, $p < .05$ *으로 표시함; 굵게 표시된 경로는 두 집단 간 경로동일성이 확보된 경우이며 나머지 경로는 형태동일성만 확보됨; χ^2 변화량 차이가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등가성제약이 확인된 경로는 북한이탈주민 집단의 계수와 유의수준만 제시

먼저 형태동일성과 등가성제약이 둘 다 확보된 경로들을 보자. 첫째, 소득수준이 주거지위를 잉태하는 경로는 양 집단에 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주거지위가 높아진다는 논리가 본 모형에서 확인된 것인데, 이는 남한주민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이다.

둘째, 소득수준과 주거지위라는 사회계층의 두 가지 객관적 측정 변수는 공히 계층의식이라는 주관적 측정 변수에 유사한 수준의 영향력을 정적인 방향으로 미치고 있다.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집단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들도 소득뿐 아니라 주거지위에 따라 자신의 상대적 계층이 어디쯤인지 가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객관적 지표에 관한 사회계층론의 이론적 가설이 본 연구에서도 확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객관적 지표들의 매개변수인 계층의식은 복지태도에 부적인 방향의 영향력을 보이며 이는 두 집단에서 동일한 계수값으로 구현된다.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소득격차를 용인하거나 적어도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고 볼 공산이 높아짐을 보여준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도 계층간에 나타난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의 차이를 그대로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는 형태동일성은 확보되지만 두 집단 간에 경로계수값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를

보자. 첫째, 교육수준이 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계수값이 남한주민 집단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가설은 기각된다. 표준화회귀계수 값을 비교해보면 교육수준이 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강도가 남한주민 집단에서 훨씬 크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복지태도의 설명요인으로서 소득수준을 조작적으로 정의하면서 가구소득을 사용하였다. 계층의식이나 복지태도가 본인의 소득만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가정보다는 속한 가구의 총소득에 의해 달라질 것이라는 가정이 이론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높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문제는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본인의 인적자본 혹은 능력 신호로서의 교육수준이 가구소득과 직접적인 상관성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각 집단의 표본 중 주소득자 비중이 유사하다는 전제 하에 북한이탈주민 집단보다는 남한주민 가구에서의 개인 간 교육수준이 상호 상관관계가 더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한데,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수준은 주로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이것이 자본주의 한국에서 활용도가 떨어짐을 의미할 수도 있다.

둘째, 교육수준에서 계층의식으로 이르는 경로값의 경우 남한주민 집단에서는 정적인 방향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지만 북한이탈주민 집단에서는 경로값 자체가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드러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지닌 북한에서의 교육수준은 한국에서의 계층의식 형성에 직접적으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되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도 교육수준이 가구소득으로 다시 가구소득이 주거지위를 통해 미치는 영향의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간접효과는 지니는 것으로 확인된다.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수준은 상대적으로 약하나마 가구소득과 주거지위를 매개변수로 하여 계층의식 형성과 복지태도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사회계층론의 견지에서 객관적인 측정지표들인 교육, 소득, 주거 관련 변수들이 계층의식이라는 주관적 측정지표를 통해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객관적 지표들과 주관적 지표 사이에 경로를 확인한 것, 객관적 지표들이 계층의식을 매개변수로 하여서만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럴 때 모형적합도가 더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집단 비교결과, 형태동일성이 확인되었고 대부분의 경로에서 등가성 제약이 성립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북한이탈주민 집단과 남한주민 집단은 생각보다 유사한 복지태도의 경로구조를 공유하는 것이다. 이는 다집단경로분석을 활용한 결과로서 기존 연구들이 주로 복지태도와 독립변수들을 동일한 차원에서 연결시킴으로써 이론적으로 또 방법론

적으로 노정한 한계를 극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전체적으로 보자면,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다른 복지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견해를 달리할 공산이 있음이 엿보이긴 한다. 개별 변수들의 평균값에서, 예컨대 북한이탈주민 집단이 더 친복지적이며 낮은 계층의식을 지녔고 소득수준이나 주거 지위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값을 보인다는 것에서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방식의 집단 간 차이는 독일 통일과정에서도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Kuhn, 2013). 하지만, 주요 변수 간에 이론적인 경로를 상정하고 분석한 다집단경로분석의 결과는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복지정치가 장기적으로는 출신지보다는 개인의 교육, 소득, 주거 등 객관적 측면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 클 수도 있으리란 예상도 가능케 한다. 사회계층에서 복지태도에 이르는 경로의 구조 전체가 형태동일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는 통일시대 복지정치가 출신지별 균열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계층구조 속에서의 개인적 사회경제 지위를 반영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교육수준이 소득수준을 거쳐 주거지위를 결정하고 주관적 계층의식을 거쳐 복지태도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경로에서 가장 선행하는 교육 부문에 관한 정책적 중요성을 함의하는 결과일 것이다. 통일과정에서 복지태도의 차이를 줄이고 복지정치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이나 주거 관련 복지도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체제 적응형 인적자본향상을 위한 교육수준의 격차를 줄이는 일에서 출발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갈등비용의 감축에 더해 재정적 비용감축의 견지에서라도 이러한 전략은 유효할 것이다. 인적자본 고양을 위한 사회정책적 투자는 결과적으로 통일비용의 대종을 차지할 북한주민 복지비용 중 소득이나 주거 부문의 선별적인 복지비용을 보다 빨리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면에서 그러하다. 그리고 선별적 복지의 비중 감소는 남북한 갈등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다. 선별적인 공공부조 성격의 조치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이 이뤄질 경우 사회를 둘로 가르는 갈등(dualism)을 야기한다는 사실은 복지국가론의 고전적 주제이기도 하다(Esping-Andersen, 1990; Ahn, 2000).

한편, 본 연구결과는 당장의 현실문제로서 북한이탈주민 복지와 관련해서도 사회정책적인 몇 가지의 함의를 준다. 북한이탈주민 집단의 경로에서 교육수준은 소득으로 이어지는 영향력이 남한주민에 비해 낮게 나타나며 두 집단 간 등가성제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성공 혹은 성공적 적응은 체제에 적합한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 향상이 관건인데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교육이 쓸모없음을 방증한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교육, 평생교육 및 훈련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 여겨지는 부분이다. 현재 이들을 대상으로 주어지는 복지는 기초적인 소득보장 중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바, 장기적인 자립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규 교육이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개인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한국사회에서 주거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경제적 약자 그룹인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주거보장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국사회에서 주거문제가 북한이탈주민을 넘어선 국민 전체의 문제이기는 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주거보장 문제는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정책과제라 여겨진다. 주거지위가 주관적 계층지위를 결정하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 북한이탈주민의 주거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사이에 불필요한 사회갈등을 존속시키거나 가중시킬 균열의 맹아가 될 것이라 여겨진다. 현금성 소득보장을 넘어선 활성화 프로그램과 주거안정 프로그램 등의 사회서비스보장이 북한이탈주민의 통합을 위해서도 중요한 정책과제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복지정치 비교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자료조사부터 시작해야 했기에 가장 기본적인 계층화 변수를 중심으로만 분석을 진행하였고 자료의 한계는 궁극적으로 본 연구의 한계로 이어진다. 본 분석에서 누락된 직업지위에 더해 납세자, 수급자, 종사자로서의 지위 등 복지정치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가 기본적인 사회계층화 관련 변수들에 더해지고 관련된 각종 통제변수들이 추가적으로 검토될 때 더욱 세밀한 복지정치의 지형이 드러날 것임도 분명해 보인다. 단순한 변수로 이뤄진 경로분석을 넘어 본격적인 구조방정식모형을 구축하고 잠재변수 간의 경로를 검토하는 것도 남겨진 연구과제의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다집단경로분석을 시도한 본 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시도는 기존의 평면적인 회귀 분석 위주의 연구가 지니는 맹점을 넘어선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룬 객관적 변수들이 결국은 복지관련 이해관계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는 토대적 변인이라는 점에서 적어도 서설적이자 시론적인 연구로서는 가치를 지녔다고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권수현, 이성우 (2017). 북한이탈주민의 복지태도: 서울·경기·인천지역 거주 북한이탈주민 조사를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9(2). 217-262.
- 김강호 (2009). 학력과 직업훈련 참여가 임금에 미치는 효과.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1(3). 123-151.
- 김교성, 최영 (2006). 근로계층의 빈곤 결정요인에 관한 다층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8(2). 119-141.
- 김기승, 오유 (2012). 자영업 부문에 있어 교육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경제연구. 30(4). 31-61.
- 김병조 (2000). 한국인 주관적 계층의식의 특성과 결정요인. 한국사회학. 34(여름호). 241-268.
- 김상균, 정원오 (1995). 90년대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25. 1-33.
- 김상돈, 서운석 (2016). 북한 및 동북아국가 인식과 남북통일 인식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공공사회연구. 6(4). 324-353.
- 김수완, 김상진, 강순화 (2014). 한국인의 복지정책 선호에 관한 연구: 성장과 분배, 선별과 보편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0(2). 67-90.
- 김승권, 이태진 (2010). 한국인의 '서민' 인식과 친서민정책의 과제. Issue & Focus. 52. 1-8.
- 김신영 (2010). 한국인의 복지의식 결정요인 연구: 국가의 공적책임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11(1). 87-105.
- 김영순, 여유진 (2011). 한국인의 복지태도: 비계급성과 비일관성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91. 211-240.
- 김원정, 류진석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 자녀의 청년 빈곤가구 이행 - 가구분리 연령과 교육수준의 다중매개효과. 사회보장연구. 35(1). 53-73.
- 김윤태, 서재욱 (2014). 한국의 복지태도와 복지제도-개별 복지제도에 대한 경제활동인구의 태도. 동향과 전망. 2. 331-378.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 쓰기. 커뮤니케이션북스: 서울: 마포.
- 김희자 (1999). 한국인의 복지태도의 분화. 사회복지정책. 8. 106-124.
- 김희자 (2013). 계급·계층이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교육변인의 조절효과 연구. 한국사회정책. 20(2). 35-68.
- 노대명, 전지현 (2011).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법래 (2014). 한국 사회의 시기 및 계층간 복지국가 지지 변동에 관한 종단연구. 행정논총. 52(4). 139-164.
- 류만희, 최영 (2009).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도 연구-복지의식, 계층, 자기이해(self-interest)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회보. 13(1). 191-210.
- 류진석 (2004). 복지태도의 미시적 결정구조와 특성. 한국사회복지학. 56(4). 79-101.
- 문슬미래전략대학원 (2018). 카이스트, 통일을 말하다: 한반도 통일 마스터플랜 2048. 파주: 김영사.
- 백정미, 주은선, 김은지 (2008). 복지인식 구조의 국가간 비교: 사민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복지국가와 한국. 사회복지연구. 37. 319-344.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9). 2018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 서광민 (2009). 주관적 계층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소득·교육수준·직업·소득 만족도·생활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 서찬란 (2018). The Role of Subjective Social Status between Family Economic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in Korea: Focusing on Household Heads. *생애학회지*, 8(3), 159-186.
- 송유진 (2015). 서민 귀속의식의 결정요인. *비판사회정책*, 49, 172-201.
- 송한나, 이명진, 최선휘 (2013). 한국 사회의 객관적 계급위치와 주관적 계층의식간 격차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 36(3), 97-119.
- 신광영 (2016). 한국 중장년 세대 내 불평등과 격차. *사회과학논집*, 47(2), 53-74.
- 신광영, 조돈문, 이성균 (2003). *경제위기와 한국인의 복지인식*. 집문당.
- 신경수, 최창렬 (2007). 학력별 임금격차와 성별 생산성격차 분석. *생산성논집*, 21(3), 97-121.
- 안상훈 (2002). 계급정치의 희석과 복지국가의 대안적 방어기제. *사회복지연구*, 19, 159-181.
- 안상훈, 박종연, 김수완 (2013). 주거 관련 물질적 이해관계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주거지위와 연관된 주요 변수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0(4), 375-398.
- 안치민 (1995). 사회복지에 대한 의식과 계급. *고려사회학논집*, 9, 211-227.
- 오지현, 여유진(2009). 한국복지패널로 본 주거복지 지표, 보건복지포럼. 158, 1-9.
- 이광호 (2002). 교육투자수익률 분석연구 상업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경제교육연구*, 9, 101-122.
- 이상은, 김희찬 (2019). 한국인 복지인식의 변화와 국제비교: 수평적 재분배와 수직적 재분배에 대한 지지의 계층 간 차이. *비판사회정책*, 62, 213-250.
- 이성균 (2002). 한국사회 복지인식의 특성과 결정요인: 국가의 복지책임지지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6(2), 205-228.
- 이수옥, 강성우, 방보람 (2018).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거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안. *국토정책 Brief*, 678, 1-8.
- 이아름, 김사현 (2010). 한국인의 복지의식 특성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34-364.
- 이윤홍 (2016). 저소득가구의 주택 점유형태에 따른 결정요인 분석. *부동산학보*, 67, 172-182.
- 이인재 (1998). IMF관리체제이후 한국인의 사회복지 인식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12, 85-110.
- 이진숙, 송혁, 이흥기 (2016). 복지태도와 순자산 그리고 교육수준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교육수준의 조절효과에 대한 탐색. *사회과학연구*, 42(2), 319-341.
- 이훈희, 김윤태, 이원지 (2011). 한국의 복지태도와 건강보험 인식의 결정요인. *사회보장연구*, 27(2), 1-25.
- 정윤태 (2018). 경제생활 위험인식이 주관적 계층의식에 미치는 영향. *사회보장연구*, 34(2), 183-208.
- 조돈문 (2001). 복지인식의 계급효과와 공사부문 효과. *산업노동연구*, 7(1), 157-193.
- 주은선, 백정미 (2007). 한국의 복지인식 지형: 계층, 복지수요, 공공복지 수급경험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4, 203-225.
- 채구복 (2015). 빈곤진입 영향요인 연구, *사회복지정책*, 42(2), 293-317.
- 최균, 류진석 (2000). 복지인식의 경향과 특징: 이중성. *사회복지연구*, 16, 223-254.
- 최승호 (2010). 북한 새터민에 대한 사회통합 방안: 독일 사례를 바탕으로. *정치정보연구*, 13(1), 161-190.
- 한국학중앙연구원 (201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 한영광, 서우석 (2014). 대도시 지역의 주거지위가 주관적 빈곤에 미치는 영향. *서울도시연구*, 15(4), 79-98.

- 허수연, 김한성 (2016).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32(3). 203-235.
- Adler, N. E., Epel, E. S., Castellazzo, G., & Ickovics, J. R. (2000). Relationship of subjective and objective social status with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functioning: Preliminary data in healthy, White women. *Health Psychology*. 19(6). 586-592.
- Ahn, S. H. (2000). *Pro-welfare Politics : A Model for Changes in European Welfare States*. Uppsala University Press.
- Becker, G. S. (1964).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New York: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ic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 238-246.
- Byrne, B. M. (2001).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Basic concepts, applications, and programming*. Mahwah, NJ: Lawrence Erlbaum.
- Chen, W., Wu, X., Miao, J. (2019). Housing and Subjective Class Identification in Urban China, *Chinese Sociological Review*. 51(3). 221-250.
- Crompton, R. (1993). *Class and stratification: An introduction to current debates*. 정태환, 한상근 (역)(1995). 현대의 계급론. 한울아카데미. 246-249.
- Dallinger, U. (2010). Public support for redistribution: what explains cross-national differenc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0(4). 333-349.
- Dietz, R. D., & Haurin, D. R. (2003). The social and private micro-level consequences of homeownership. *Journal of Urban Economics*. 54(3). 401-450.
- Edlund, J. (1999). Trust in government and welfare regimes: attitudes to redistribution and financial cheating in the USA and Norwa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35. 341-370.
-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Esping-Andersen, G. (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Evans, M. D. R., & Kelly, J. (2004). Subjective social location: data from 21 n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6(1). 3-38.
- Gërxxhani, K., & Koster, F. (2012). 'I am not alone': Understanding public support for the welfare state. *International Sociology*. 27(6). 768-787.
- Giddens, A. (1983). Class Division, Class conflict and Citizenship Right, In *Profiles and Critiques in Social Theory*. London: Macmillan.
- Goldman, N., Cornman J. C. & Chang, M. C. (2005). Measuring subjective social status: A case study of older Taiwanese. Office of Populations Research. Princeton University, Working paper 2005-02.
- Hansenfeld, Y. & Rafferty, J. A. (1989). The Determinants of Public Attitudes toward the Welfare State. *Social Forces*. 67(4). 1027-1048.
- Häusermann, S. & Walter, S. (2009). Restructuring welfare politics: post-industrial labor markets, globalization and welfare preferences. In General Conference of the European Consortium for Political Research, Potsdam.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sing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y Measurement*. 63. 636-654.
- Houthakker, H. S. (1959). Education and Income.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4(1). 24-28.
- Iversen, t., & Soskice, D. (2001). An asset theory of social policy preferenc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5(4). 875-894.
- Hu, I. Z., & Bentler, P. M.(1999). Cut 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Jaeger, M. (2006a). Welfare Regimes and Attitudes Towards Redistribution: The Regime Hypothesis Revisited.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2(2). 157-170.
- Jaeger, M. (2006b). What makes people support public responsibility for welfare provision: self-interest or political ideology?: A longitudinal approach. *Acta Sociologica*. 49(3). 321-328.
- Karlsson, L. (2017). Self-Placement in the Social Structure of Sweden: The Relationship between Class Identification and Subjective Social Placement. *Critical Sociology*. 43(7-8). 1045-1061.
- Kim, B. Y. (2017). *Unveiling the North Korean Economy: Collapse and Trans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line, R.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London: The Guilford Press.
- Kitschelt, H. & Rehm, P. (2006). New social risk and political preferences. In the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Europeanists, Chicago.
- Kuhn, A. (2013). Inequality Perceptions, Distributional Norms, and Redistributive Preferences in East and West Germany. *German Economic Review*. 14(4). 483-499.
- Lee, J., Park, T. & Davis, R. O. (2018). What affects learner engagement in flipped learning and what predicts its outcome?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November. 1-18.
- Lindemann, K. (2007). The impact of objective characteristics on subjective social position. *TRAMES*. 11(61/56)(1). 54-68.
- Lindemann, K. & Saar, E. (2014). Contextual effects on subjective social position: Evidence from European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55(3). 3-23.
- Lipsmeyer, C. & Nordstrom, T. (2003). East versus West: comparing political attitudes and welfare preferences across European societies.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10(3). 339-364.
- Megbolugbe, I. F. & Linneman, P. D. (1993). Home ownership. *Urban Studies*. 30 (4-5). 659-682.
- Papadakis, E. & Bean, C. (1993). Popular Support for the Welfare State: A Comparison Between Institutional Regimes. *Journal of Public Policy*. 13. 228-254.
- Piff, P. K., Kraus, M. W., Côté, S., Cheng, B. H., & Keltner, D. (2010). Having less, giving more: The influence of social class on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9(5). 771-784.
- Rehm, P. (2009). Risks and redistribution: an individual-level analysi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2(7). 855-881.
- Rex, J., & Moore, R. (1967). *Race, Conflict and Community: A Study of Sparkbroo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ossi, P. H., & Weber, E. (1996). The social benefits of homeownership: empirical evidence from national surveys. *Housing Policy Debate*, 7(1), 1-35.
- Saunders, P. (1984). Beyond housing classes: the sociological significance of private property rights in means of consump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8(2), 202-227.
- Svallfors, S. (1995). The End of Class Politics? Structural Cleavages and Attitudes to Swedish Welfare Policies. *Acta Sociologica*, 38(1), 53-74.
- Svallfors, S. (1997). Worlds of Welfare and Attitudes to Redistribution: a Comparison of Eight Western Nation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3, 233-304.
- Svallfors, S. (1999). Political Trust and Attitudes Towards Redistribution. A Comparison of Sweden and Norway. *European Societies*, 1, 241-268.
- Svallfors, S. (2004). Class, Attitudes and the Welfare State: Sweden in Comparative Perspective.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38, 119-138.
- Tucker, L. R., & Lewis, C. (1973). A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8, 1-10.

Abstract

A Study of Multi-group Path Analysis on Difference of Welfare Attitude between North Korean Defectors and South Koreans*

Sang-Hoon Ahn**

This study statistically examine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oretical path of welfare attitude between North Korean defectors and South Korean residents, which was suggested based on the theories of social stratification. A method of multi-group path analysis was applied to examine configural invariance and cross-group equality constraints.

Analytical results shows that hypotheses of configural invariance and almost all of cross-group equality constraints except coefficients from educational level was accepted. All in all, hypothesis of the theoretical path structure of social stratification, in which welfare attitude is determined by the mediating variable of strata consciousness. Subject strata consciousness is in turn determined by objective variables of education level, income level and housing status. This means that hypotheses of human capital theory and housing class theory are also statistically accepted.

In conclusion, some implications for politics and policy-making are suggested on the basis of the statistical results. There are possibilities that result in soft-landing of welfare political conflicts between North and South residents. Policy orientation for North Korean defectors should be modified to expand more social services of activation and housing security, beyond the passive measure of income transfers.

Keywords: welfare politics, welfare attitude, welfare status theory, North Korean defectors, multi-group path analysis, configural invariance, cross-group equality constraints

◆ 2019. 12. 27. 접수 / 2020. 1. 29. 1차수정 / 2020. 2. 12. 게재확정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Grant in 2018.

**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onco@snu.ac.kr)